

차기정부 대북정책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?

2021. 12. 22.

손광주 前 남북하나재단 이사장

목차

1. 대북정책 4대 과제
2. 대북정책 실패와 종전선언
3. 최우선 과제:
 ‘북한인권특별위원회’ 설치

1. 대북정책 4대 과제

▶ ①북핵 ②북한인권 ③개혁개방 ④평화통일

▶ 정부 대북정책 기본 방향= ▷북한이 군사도발을 못하도록 억지(deterrence)하면서 ▷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▷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▷'자유민주적 기본 질서' 평화통일로 나아간다.

▶ 문재인 정부= 종전선언·평화협정(한반도 평화프로세스) 집착

현 시기 대북정책 최우선 과제

① 북핵

대한민국 국민 생존 문제. 유엔 안보리 이슈

② 북한인권

- ▶ 유엔 안보리 및 인권이사회 이슈
- ▶ 20여년간 국제 이슈로 객관화

- ▶ ※ 북핵·북한인권이 차기정부 대북정책 최우선 과제
분명

2. 文정부 대북정책 실패와 종전선언

판문점선언·평양선언(2018) ▷ 싱가포르 선언
(2018. 6.) ▷ 하노이 회담(2019. 2.) 실패
⇒ 미·북 중재외교 예견된 실패

▷ 北, “삶은 소***” 비난,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, 금강
산지구 남한자산 해체·몰수, 서해 NLL 한국 공무원 사살·
소각 분풀이.

⇒ 文, 종전선언 집착

우리 프로세스대로 간다 + 대통령선거 與후보 지원용

종전선언 관련국 입장

한국

▷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(2021. 5. 21.) 中

“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,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.”

▶ 반도체 등 경제통상 대폭 양보하고 한 문장 확보.

종전선언 관련국 입장

미국

‘원칙적’ 동의. 백악관·국무부 종전선언 관심 저하.

-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“순서·시기·조건에 한국과 다소 이견(異見) 있을 수 있다”
-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, 종전성명(end of war statement) 표현 사용.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(종전선언)
 - ▶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시사.
 - ▶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선행(先行)이 필요하다는 입장.

종전선언 관련국 입장

북한

9. 25. 김여정 담화 "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해야"

-남조선이 노력해서 미국에게 대북제재 해제,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토록 하라는 의미.

중국은 종전선언 적극 찬성

임기내 종전선언 ‘불투명’

- ① 미국·북한 접점 어렵다
- ② 미국,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
 - 바이든 정부 첫 대북제재(리영길 국방상 등)
- ③ 김정은,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어렵다
 - 수령의 신체보존 우선(오미크론 확산)
 - IOC 북한 회원자격 2022년 말까지 정지
 - 선수 개인자격(중립국 자격)으로 출전 가능
- ④ 한반도 종전선언·평화협정은 미·중이 확실한 의지 갖고, 북한이 개혁개방 의지 있을 때 가능.

3. 최우선 과제:

‘북한인권특별위원회’ 설치

민주당 = 북한인권법(2016 제정) 시행 거부(불법)
대북전단법 제정 등 반헌법 행태.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기
대 난망

**현 고착상황을 해결하는 방안⇒ 대통령 직속 ‘북한인
권특별위원회’ 설치**

북한인권문제 ①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(국
군포로·납북자·이산가족) ② 북한주민 인권문제 ③
재외 탈북자 인권문제

▶ 통일부·외교부·법무부 등으로 업무 분산

3. 최우선 과제:

‘북한인권특별위원회’ 설치

- ▷ 통일부·외교부·법무부 +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 통합·조정
- ▷ 유엔·미국·일본·EU·캐나다·호주·동남아국 등 유관국 및 해외 북한인권단체들과의 협력 강화
- ▷ 북한인권문제의 세계 이슈화 추진. 미국의 對중국 전략에 협력함으로써 실질적 ‘쿼드 + 한국’ 효과
- ▷ 중국 서쪽은 신장(新疆)인권, 동쪽은 북한인권으로 중국 압박 효과

3. 최우선 과제:

‘북한인권특별위원회’ 설치

※ 북한인권정보센터(NKDB)

<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>

①국민 91% “북한인권 상황 심각하다” ②66% “북한인권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” ③ 60% “한국정부 직접 개입해야”로 조사.

북한인권특별위원회 = 시민사회 + 정부, 한국 + 미국 + 국제사회 연대의 핵심 고리 역할.

감사합니다.